

이력

실업자문제 근본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모래성 실업대책, 반석 위에 다시 서야

정영철

(노동정책연구소 편집부장)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우리나라도 고실업 사회가 되었다.

환난(換亂)과 금융위기로 시작된 한국경제의 침체는 국가부도 상태인 모라토리움 직전에까지 물리게 되었다. IMF 구제금융 이후 우리 경제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고실업의 4고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노동시장 구조의 유연화라는 IMF의 요구에 맞춘 정리해고제 및 파견근로제 도입과 파임 중북부자 된 산업구조 조정, 기업의 군살빼기 등으로 실업률은 급증하고 있다. 정부의 추산으로도 3월 현재 150여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였으며, 민간경제연구소는 정리해고제 예고기간이 끝나는 6월이 되면 200만명이 넘어서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벌개혁·환율·물가안정 등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준비되고 일부는 실시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대량으로 쏟아

져 나오는 실업자들에게 대한 대책이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될 때 개인적 파산은 물론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어 엄청난 사회적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실업대책 '탁상행정'

최근 정부는 실업 및 고용대책으로 7조9천억원의 재정을 마련하고,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에 대한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실업자 생계지원 ▲각종 벤처기업 육성 및 공공투자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4개분야에 걸쳐 각종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실업 및 고용대책 사업은 대표적 '탁상행정'으로 비판받고 있다.

즉 정부의 정책이 종합적 체계를 갖춘 정책이라기 보다는 각종 단편적인 부문별 대책을 짜깁기하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량실업사태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성격을 띠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정부대책은 지나치게 단기위주일 뿐 아니라 실업대책의 우선순위에 재원조달 규모와 방법 등에도 상당한 문

제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실업 및 고용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자.

우선 정부가 주요 실업대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각 시·도에 따르면 행자부가 '공공자원봉사사업' 노동부가 '공공근로사업', 복지부가 '취로사업', 환경부가 '국토청결사업', 해안수산부가 '바다환경 미화원제도', 산림청이 '생명숲가꾸기 사업' 등의 이름으로 최근 잇따라 공공근로사업 실시 계획을 발표한 뒤 일선 시도에 이를 내려 보냈으나 각 시·도는 중앙부처의 사업내용이 겹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 일선 시·군·구에서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자원봉사자 모집 첫날인 4월 1일 접수창구조차 열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만 전 화상담을 해 실직자들이 정부의 졸속 행정에 불만을 터뜨렸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기가차다. 정부의 공공근로사업에는 공무원의 임금삭감으로 조성되는 재원 1조1천1백9억원 중 5천1백19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그런데 행자부는 4천9백50억원, 보건복지부는 3천억원, 해양수산부 1백80억원, 노동부 1백50억원, 환경부 1백17억원의 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을 벌인다고 발표해 이들 예산을 더하면 이미 책정된 정부 전체 예산을 웃돌고 있다.

또 현재 책정된 약 8조원의 실업대책 자금도 실업자가 연평균 130만명에 그친다는 전제에서 마련된 것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한 상황에서 실업규모도 150만명을 훨씬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실업대책 재원도

실업대책 총괄할 통합조직 필요

추가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판 뉴딜로 불리는 정부의 실업대책은 일자리 창출로 무게의 중심을 조금이나마 이동하였다는 것에서는 이전의 실업자 생계지원 대책보다 진일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실업대책이 생계비 지원에 큰 무게가 실려있고, 각 부처마다 생계비 대책사업으로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재원마련에 있어서도

난감한 처지에 있다.

우선 정부는 실업대책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통합조직을 만들어 사전조율과 완벽한 실행계획 속에서 대책들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실업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한시적인 목적세가 필요하다. 그 명칭이 '복지세'든 '실업세'든 이 세금은 불로소득 특히 고금리 시대의 이자소득에 징세되어 가진 계층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국의 뉴딜 정책을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였다는 것으로만 기억하는데 뉴딜의 핵심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노동자를 탄압하기는 커녕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일련의 개혁들을 취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에 비해 노동자의 힘이 너무 약했던지 20년대 대공황의 원인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우리 정부도 지금의 경제위기를 불러 온 근본적인 원인인 재벌경제의 폐해는 노동자들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여 감시·견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사 설

학생운동개혁, 방해마라

또다시 한총련 관련 소식들로 언론이 장식되고 있다.

해마다 겪는 홍역이지만 올해만큼은 여느 때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다. 이미 부산대에서 유치하기로 한 한총련 출범식이 부산대 학생들의 반대로 좌절되었다는 소식도 있거니와 영남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대의원 대회도 원천봉쇄되어 무산되었다.

진작부터 한총련은 와해의 위기감 속에 허덕여 왔다. 지난 해 한양대에서 있었던 출범식에서의 인명사고는 한총련의 앞날을 예고하는 암울한 전조였다. 올해 들어 전국 각처에서 한총련 대체기구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전조의 다음 수순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한총련의 위기감과 새로운 학생기구의 출범 소식은 반드시 암울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전에 전대협이 한총련으로 탈바꿈했듯이 이제 새로운 시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치열한 자기모색의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정치투쟁이나 정서에 맞지 않는 폭력투쟁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학생운동에 기대하는 바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 맞이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암울함은 한총련에 대한 우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암울함은, 변화를 모색하는 학생운동을 전과 다름없이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국가보안법으로 적용시키려 하는 공안당국의 자세에서 나타난다. 5공화국에서부터 문민정부로 일궈졌던 김영삼 정부까지 공안당국의 학생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 문제는 국민의 정부라 스스로 칭하는 현 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공안당국의 시각이 교정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국이 한총련을 고사시키려 하는 근거는 간단하다.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구성행위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시절, 공안당국에 탄압의 빌미를 제공했던 국가보안법이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악법이라는 점을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

낡은 법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재단하려 한다면 역사의 발전은 오히려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 그간 한총련이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와 유리되고 구성원들이라 할 대학생들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면 내부에서부터 철저한 자기개혁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그러한 개혁이 외부의 인위적인 강압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학생운동이 지니고 있는 자생력과 비판력으로 완수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대규모 사법처리나 물리력을 동원한 틀어막기는 더 이상 인정될 수 없다. 더딜지 모르지만 학생운동 내부에서 진행되는 개혁의 과정과 새로운 조직으로 구체화될 수도 있는 자기모색을 지켜보는 여유로움이 아쉽다.

세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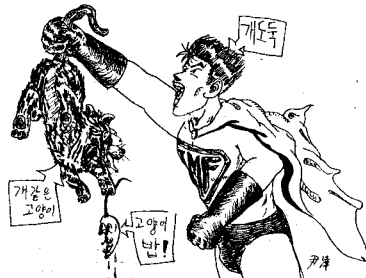
행정 무원칙, 부정 재벌 기른다

대기업, 그들은 진정 이시대의 절대권력층인가?

지난 90년 11월 수서지구 택지 특별분양과 관련해 온 나라가 떠들썩한 적이 있었다. 뇌물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하는 문제로 한바탕 흥역을 치른 1990년. 그 불미스러운 사건이 우리의 뇌리에서 사그라들기도 전에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발생하려는 기미가 보인다.

문제의 발단은 7년을 끌어온 동아건설의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문제가 현실논리에 밀려 허공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데 있다. 동아건설 채권은행단이 정부에 김포매립지 용도변경을 건의하기로 했으며, 인천시와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을 끌어들여 이곳을 테마파크로 개발할 계획이라는 보도들이 그것이다.

동아는 중동에서 들어온 유류 중장비를 활용해 91년 3백74만평의 농업용지 개발매립공사를 끝냈다. 그러나 7년이 넘도록 농업용수가 없다는 이유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 사막의 나라인 리비아에 대수로를 건설한 동아건설이 농업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한다(?!). 그들은 분명 농지에서 산업용지 등으로 용도변경시 얻을 시세



최현일 사회부장

차익 때문에 공사일을 차일피일 미룬 것이다. 전문가들은 동아가 지금 상태에서 토지비를 빼고도 7천억원 가량의 개발이득을 볼 수 있으며, 더욱이 용도가 변경될 경우 땅값은 10조원에 이르러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 정부는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기업의 계획된 움직임을 막아내야 한다. 그 이유

는 단지 쌀 자급기반 확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특혜조치가 생길 경우 제2·제3의 간척지에서 용도변경 요구가 잇따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금쯤 분명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둘 예외 조항을 만들어낸다면 분명 사회전반에 커다란 파장이 생길 수 있다. 또한 그 파장은 사회전반에 도미노현상을 일으켜 걷잡을 수 없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정치가 실패대위에 놓일 수는 없다. 이번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대기업의 풀린 고삐를 잡고 독주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재벌해체와 구조조정 명분이 외자유치 앞에서 우야무야 돼서는 안될 것이다.

PC 통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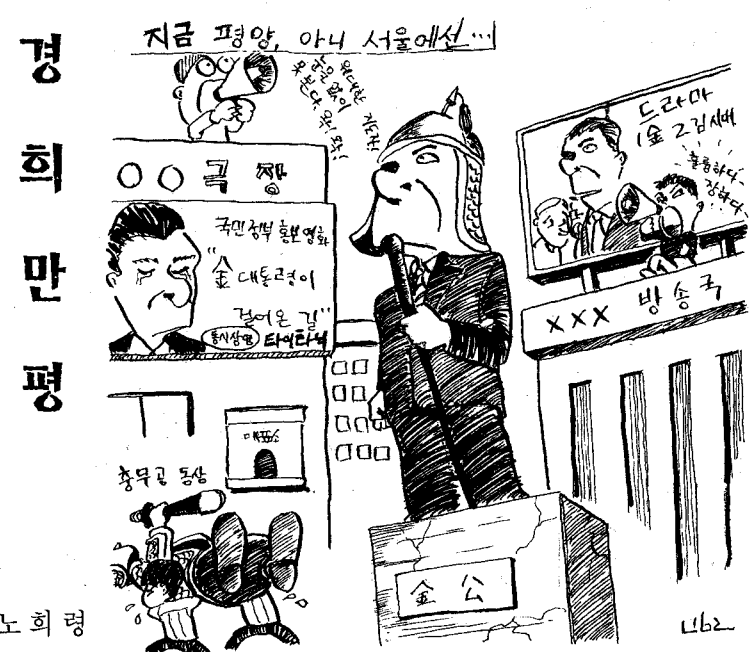
방송계, 박찬호 중계 불협화음

작년 여름, 날카로운 강속구로 사람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했던 박찬호 선수. 올해도 그의 경기를 생생히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MLB(메이저리거스)가 책정한 3백만 달러의 높은 중계료로 인해 방송3사가 박찬호중계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일 인천방송이 1백만달러로 박찬호경기 중계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인천방송으로 중계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느냐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들이 경제현실을 무시한 인천방송의 계약에 항의성명을 발표하는 등 여론의 반발도 거세다. PC통신에도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한창인데, 금모으기, 저축하기를 외치면서 눈요기를 위해 1백만달러를 내어 주는 것이 아깝다(하이텔ID:나라인자)라는 등의 비난이 대부분이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선수들이 메이저리거에 나올데고 MLB는 그때마다 중계료를 받으려 할 것(ID:billie74)이라며 인천방송이 MLB의 '한국 길들이기' 전략에 걸려든 것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케이블을 설치하지 않으면 인천 TV가 잡히지 않는 지역 사람들은 시청을 포기해야 한다(유니텔ID:류신)며 많은 시청자의 볼 권리를 무시했다는 의견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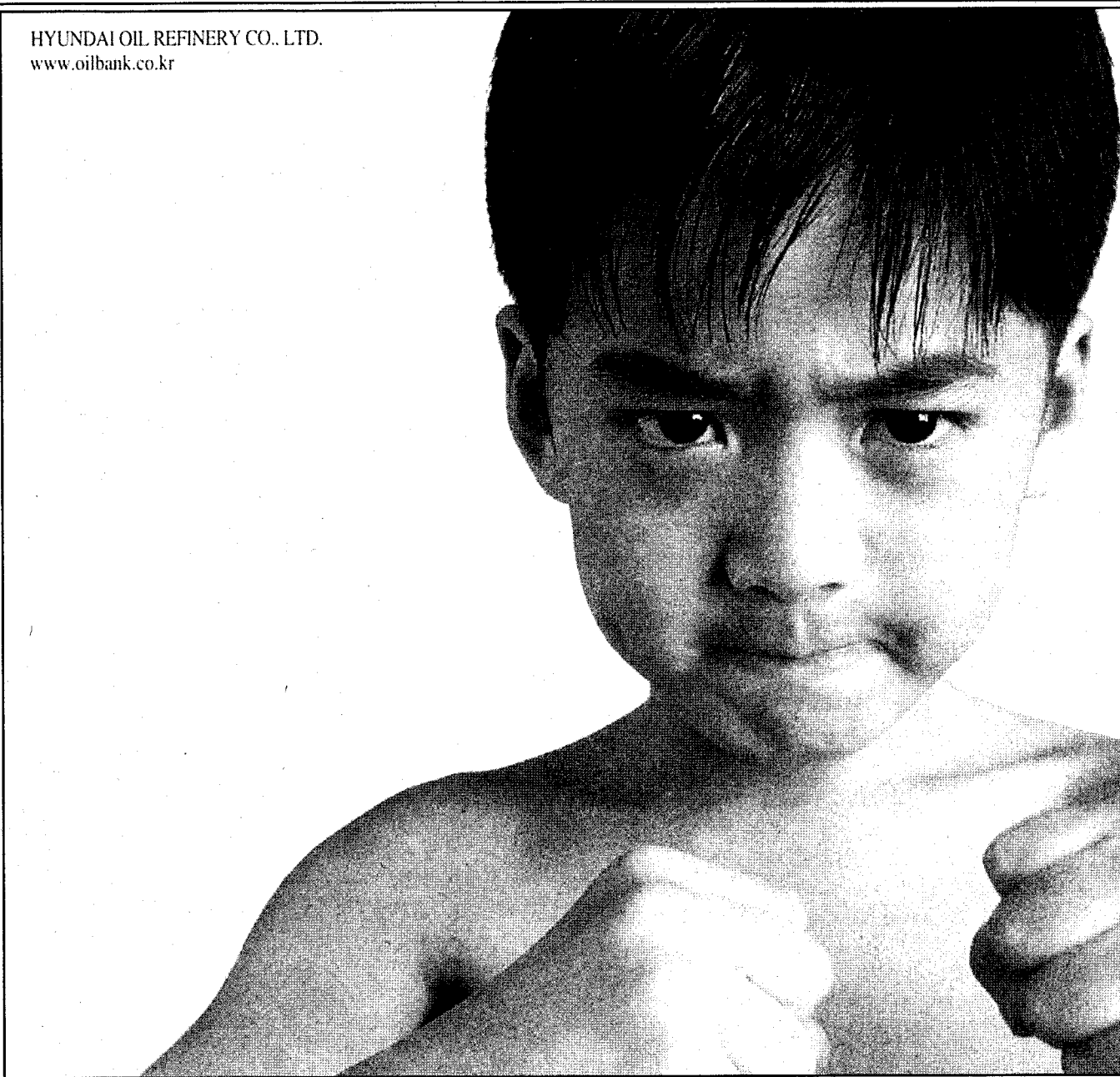
한편, KBS 등 방송3사가 지역방송의 한계성을 들먹이며 추측비방보도를 남발하는 것은 여론 조작(유니텔ID:instour)이며 지난해 박찬호의 독점중계를 했던 KBS의 인천방송 비방보도는 공평성을 잃은 행위다(천리안ID:jh9007)라는 주장도 있다.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박찬호 선수의 경기를 일부 지역에만 볼 수 있다는 것은 인천방송 자사의 이익만을 앞세운 이기적인 처사였다. 방송3사는 계약파기를 주장하고 나섰으나 인천방송측은 계약파기시 3배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한다. 방송사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송사간의 협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중계를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수운 기자)



HYUNDAI OIL REFINERY CO., LTD.
www.oilbank.co.kr



OILBANK

Imagine Your Energy!

자~ 힘을 내, 힘을 내자구!
모두가誇이라고 말한 곳에서, 우리 다시 시작한다!